무너진 신뢰 회복이 최우선…입주예정자·상인 "환영"

화정아이파크 8개동 전면 철거 후 재시공 배경과 반응

재시공·피해 보상 등 3750억 투입 예상…"구체적 지원책 조속히 마련을"

서구 "전혀 예상 못했다…법령 검토 거쳐 빠른 시일 내 로드맵 만들 것"

HDC현대산업개발이 4일 '붕괴사고'가 일어난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8개 동을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화정아이파크 건설 현장 모습.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HDC현대산업개발이 4일 붕괴 사고가 난 201동을 포함해 단지 내 전체 8개 동을 전면 철거, 재시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 상인 등 피해자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전면 철거 후 재시공 결정이 유례가 없었던 데다 공사기간만 5년이 넘고 투입될 비용이 수천억원 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회사 측 발표대로 이 모든 과정이 잡음 없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다.

특히 올 11월 말 입주 예정일 뒤에는 당장 가족들 보금자리가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선 "정몽규 회장의 결단을 환영한다"면서도 "회사 측이 주거지원책 등 구체적 지원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 "정몽규 결단 환영"…"구체적 일정표, 지원책 제시를" = 이승엽 예비입주자 협의회 대표는 이날 오전 현대산업개발 측 발표 직후 "늦은 결정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다른 예비입주자들도 울면서 '고생했다'며 기뻐하고 있다"고 예비입주자들의 심경을 전했다.

이 대표는 정몽규 회장의 발표에 따라 총론 격인 방향성은 확정됐지만, 입주예정자들이 궁금해하는 '각론'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장 올 11월 30일 입주예정일에 맞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내놓은 예정자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 발표 이전) 입주예정자 600명이 오는 13일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열기로 한 항의 집회를 취소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며 "현대산업개발 측이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통큰 지원책을 서둘러 내놨으면 좋겠다"고 했다.

예비입주자협의회는 특히 이날 오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아파트 철거와 재시공 일정표 제시를 촉구하면서 전체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에 설계 도서와 함께 공사 재개 후 감리보고를 공개를 요구한 것도 다시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가 없도록 입주 예정자들이 살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인근 상인들도 철거 결정을 반겼다. 홍석선 피해상가비상대책위원장은 "유족들과 예비입주자들 모두 환영할 만한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다. 같이 피해 입은 입장에서 원하던 결과가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상가대책위는 이날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만나 피해 상인들의 요구를 듣고 납득할 만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답을 받기도 했다. 다만 상가대책위는 피해를 호소하는 131곳 상가 모두 구체적인 피해 정도가 달라 구체적인 보상안을 정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유례 없는 8개 동 전면 철거, 재시공…'신뢰 회복'이 우선 = 정몽규 HDC 회장의 전면 철거 결정은 회사의 '신뢰 회복'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에 이어 화정아이파크까지 잇따라 붕괴 사고를 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171석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줄기찬 압박과 조만간 들어설 윤석열 당선인 측의 경고 메시지가 현대산업개발의 이날 결정의 한 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지난 29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현장을 찾아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난다면 기업은 망해야 하고 공무원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공사 일정과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은 철거 후 준공까지 70개월(5년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사비와 입주자·상인 보상까지 포함해 3750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미 화정아이파크 재시공·보상비 등 명목으로 1754억원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했으며, 올해 중 추가로 2000억원 비용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피해자들은 물론 관할 지자체, 현대산업개발 실무자들과도 사전 협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철거 계획 등 공사 일정을 확정짓는데 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서구 관계자는 "그동안 사고 동 안정화 작업과 전체 동 안전진단에 관해서만 논의 중이었는데, 전면 철거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시공사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법령 검토를 거쳐 철거·재시공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안전 대책 요구하던 상인들 경찰 조사 받나

진출입로 막아 해체작업 일시중단

현대산업개발, 업무방해 7명 고소

화정아이파크 철거 작업에 앞서 '안전 대책'을 요구하던 인근 상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전체 동 철거, 전면 재시공' 방침을 전격 발표했으나 사고 현장 주변에선 이해관계자들간 크고 작은 다툼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광주서부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일 피해상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상인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책위는 지난달 25일부터 10일 여동안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진출입로를 1t트럭과 승용차 등으로 막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동인 201동 잔해물 해체(안정화)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있던 현대산업개발측은 장비 반입이 어려워지자 작업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대책위는 지난 2월 25일부터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안정화 작업에 앞서 주변 상가와 행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개월 가까이 현대산업개발과 광주시 서구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최후 수단으로 공사장 진출입로를 막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측의 고소에 따라 조만간 대책위 위원장 등 피고소인 7명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어린이 교통사고, 가정의 달 5월에 '최다'

광주 5년간 2171건 8명 사망

전남 2644건으로 20명 숨져

광주에서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2171건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278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선 이 기간 어린이 교통사고 2644건이 발생, 20명이 숨지고 3445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저학년 어린이일 수록 사상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최근 5년간(2016~2020년)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내놨다.

공단은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은 연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달로, 광주는 212건(9.8%)의 교통사고와 254명(9.1%)의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했고, 전남은 300건(11.3%)의 교통사고와 397명(11.5%)의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는 학년이 낮을수록 교통사고 사상자가 많아 1학년의 사상자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오후 4~6시에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 저학년의 하교시간대 보행안전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0.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8명)보다 낮았으나, 보행어린이(0.34명)로 한정할 경우 회원국 평균(0.23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노태우 전 대통령 묘역 국가보존묘지로 지정

보건복지부는 4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역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동화경모공원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해 달라는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분묘 크기는 약 8.4㎡다.

국가보존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 국가장·사회장 등으로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된 묘지와 분묘는 묘역 면적,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나 크기, 분묘 설치기간 등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상무지구(상가매매)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앞)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총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운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5/1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시외	충남 서천군(근린주택)▶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5/23)

010-6670-9800